



주간통일정세 2013-33(2013.08.12~08.1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3-33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유일사상 10대 원칙' 첫 개정...세습·노동당 부각(8/12, 연합뉴스)**
 - 북한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 규범 역할을 하는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제목까지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바꿨으며 10조 65항으로 이뤄졌던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올해 6월 10조 60항으로 축소, 통합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고 노동당의 권능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담음.
 - 김정은 시대 들어 김정일 위원장을 김 주석과 동급으로 격상한 북한은 이번에 개정된 원칙에서 '김일성'이라는 문구를 '김일성·김정일'로 바꾸고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경함.

- **北 김정은, 김일성대 과학자아파트 공사현장 방문(8/1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새집에 입주할 과학자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과 TV 등을 마련해주라며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완공시킬 것을 지시함.

- **北 김정은, 평양시민과 남자 축구경기 관람(8/1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시민들과 함께 '조국해방 68돌(광복절 68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룡악산팀과 보통강팀 간의 남자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5일 보도함.

- **北 "강성국가 건설에 매진하자"(8/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사설에서 "8월 15일은 우리 인민의 운명 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오고 사회주의 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민족사적 경사의 날"이라며 "조국이 해방되고 번영해온 역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영도 역사이며 우리 인민의 애국적 투쟁의 역사"라고 주장함.
 - 신문은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세상을 세우던 건국의 나날처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주민을 독려함.



- **北 김정은, 마식령스키장 건설장 시찰(8/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 제1위원장이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을 찾아 건설 상황을 보고받은 뒤 만족감을 표시하고 건설을 독려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스키장의 건설장의 호텔과 서비스 및 숙소건물, 스케이 트장 등을 돌아봤고, 특히 스키주로(슬로프)가 보이는 곳에서 "무더기비 (집중호우)가 내린 이번 장마철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함.
 - 그는 "지난 5월 26일 건설장을 돌아볼 때와 비교해보면 마식령지구가 천지개벽됐다"며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 마식령스키장 시찰에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태성·황병서·김병호·마원춘 당 부부장, 전창복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영철 정찰총국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수행함.

- **북한, 조총련에 금수산태양궁전 유지비 모금 지시(8/18, 산케이 신문)**
 -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 유지 기금을 모으라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지시한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이 18일 보도함.

- **北 김정은 체제, 규범·절차 강조...통치방식 변하나(8/18, 연합뉴스; 정치법률연구)**
 -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학술잡지 '정치법률연구' 2013년 2호(6월 14일 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2월 19일 '공화국 법제정법'을 새로 제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힘.
 - 잡지에 관련 논문을 기고한 리경철 박사는 법제정법을 "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들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법제정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시기 법제정 사업을 개선하는 중요 방도"라고 강조함.

■ 김정은동향

- 8/13,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건설장 방문(8.13,중통)
 - 최태복, 리재일, 박태성, 마원춘 동행
- 8/15, 김정은 黨 제1비서, 8.14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축구경기(용악산팀 對 보통강팀) 관람(8.15,중통·중방·평방)
 - 박봉주, 최룡해, 장성택, 장정남, 김경희, 김기남, 최태복, 강석주,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조연준 등 관람



■ 기타 (대내 정치)

- 김일성·김정일의 양강도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8.14 김희택 (양강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下 진행(8.14, 중방)
- "8월 15일은 우리(北)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 오고 사회주의 조선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민족사적 경사의 날"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黨의 영도 밑에 인민이 주인 된 나라"라고 강조(8.15, 중통·평방·노동신문)

나. 경제

● 北 "경제강국 건설에 힘 집중하자"(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1면 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해 공화국 창건(9월 9일) 65돌을 계기로 강성변영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뜻깊은 올해를 승리의 해로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호소함.
- 신문은 "우리에게는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주체적인 사상과 노선이 있으며 위대한 당의 세련된 영도가 있다"면서 "당정책 결사관철의 정신은 경제강국 건설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진심으로 영도자를 받들고 자기 위업의 승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당정책 결사관철의 정신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함.

● 北 '9·9절' 분위기 띄우기...초점은 '경제강국'(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총공격전에 더 큰 박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 창건 65돌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자량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총공격전에 더 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누구나 '공화국 창건 65돌을 맞는 뜻 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내세운 올해 전투 목표들을 앞당겨 결속하고 공화국 창건 65돌의 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라고 독려함.

다. 사회·문화

● 북한, 평남 평성시 관광 개방(8/14, 연합뉴스)

- 북한이 지금까지 개방하지 않았던 평안남도 평성시를 관광지역으로 개방했다고 중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가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여행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새로운 도시인 평성의 문이 열렸다"며 관광객들이 평성시 중심가, 6·25전쟁 시기인 1952년 김일성종합대학이 자리했던 백송혁명사적지, 고구려 시대인 서기 503년 창건됐지만 전쟁 시기 파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안국사, 김정숙고등학교를 방문할 수 있다고 전함.



● 北, 위락시설 즐기는 주민생활 집중 부각...왜(8/15, 조선중앙방송; 평양 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5일 '현지취재반'을 인용해 "온 나라 방방 곡곡에 펼쳐진 행복상의 일부를 능라인민유원지에서 전한다"며 15일 이 유원지를 찾은 평양시민의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을 소개함.
- 방송은 능라유원지뿐 아니라 "(대동강 주변의) 인민야외빙상장과 류경원, 해당화관과 옥류관 등 봉사시설에서 문화 정서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근로자들의 기쁨의 노랫소리와 행복의 웃음소리가 대동강 기슭에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다"고 전함.

● 北신문 "올해 국제체육대회 금메달 50여개"(8/17, 노동신문)

- 북한이 올해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50여개의 금메달을 땀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밝힘.
- 노동신문은 1면에 게재한 '천만군민을 최후승리로 고무추동하는 자랑찬 체육성파'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국제경기에서 금메달 획득 수가 2.7배로 장성하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됐다"며 이같이 소개함.

■ 기타 (대내 정치)

- "공화국 창건"(48.9.9) 65돌 기념 공화국선수권대회 1급 남자축구경기, 8.15 김일성경기장에서 시작(8.15,중통·중방)

2. 대외관계

가. 일반

● 파나마 "北 선박 수색종료...미사일 발사장비도 발견"(8/12, 연합뉴스)

- 파나마 정부가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대한 수색을 11일(현지시간) 종료했으며, 파나마 공공안전부 호세 라울 물리노 장관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발견된 컨테이너에서 미사일발사에 필요한 장비를 발견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함.

● 北, '日 독도 여론조사' 규탄(8/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를 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데 대해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뿐 아니라 방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 독도를 어떻게 해서나 제 것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야심은 끝이 없다"며 "용납 못할 영토 강탈 야망의 발로"라고 규탄함.



- **北역류 케네스 배 여동생 "오빠 몸무게 22kg 빠져"(8/12, CNN, AP통신)**

 - 케네스 배 여동생 테리 정씨는 11일(현지시간) 오빠 배씨의 몸무게가 22kg 이상이나 빠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건강상태가 크게 나빠진 만큼 송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미국 CNN 방송과 AP통신이 12일 보도함.
- **北역류 케네스 배 친선병원 입원..."美 정부 도와달라"(8/12, 조선신보)**

 - 건강이 악화돼 지난 5일부터 외국인 전용병원인 평양친선병원에 입원해 있는 케네스 배 씨가 "미국 공민으로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줘서 제가 공화국(북한)에서 사면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12일 보도함.
 - 배 씨는 "미국 정부의 고위급 관리가 와서 저를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를 하고 또 사면을 요청하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힘.
- **中 "북한, 중국의 중요 방어막"(8/13, 환구시보)**

 - 환구시보는 13일 자사 평론원 명의의 논평에서 "중조(북중) 우호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정학적 요소"라며 "조선(북한)은 지정학적 의미에서 중국의 중요한 방어막"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시대가 변했지만 지정학적 관성은 많은 변화를 초월한다"며 "오늘날 조선의 국가 안보는 여전히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사회주의권에서 전례가 없는 3대 세습을 하는 등 중국식 사회주의와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방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 본조사단 18일 방한(8/13, 연합뉴스)**

 - 외교부가 13일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비롯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위해 18~27일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사단은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과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 조사위원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꾸려졌으며 19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두루 만날 예정임.
- **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외교적 해결' 제안(8/13, 마이애미헤럴드)**

 - 쿠바 이바나의 북한 대사관은 지난 9일 파나마 정부에 보낸 구두 친서에서 '청천강호' 사건을 외교적으로 풀기를 원한다면서 파나마 당국에 특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파나마가 '이 문제는 유엔 소관'이라며 북한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미국 마이애미헤럴드가 12일(현지시간) 보도함.



- **北, 잇단 일본 비난…"과거범죄 인정·청산해야"(8/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수치도 모르는 자들의 망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달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과 관련한 일본 당국의 반응에 대해 "후안무치한 언동"이라고 비난함.
 - 신문은 "일본이 앞으로도 성노예 범죄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비열하게 놀아댄다면 더 큰 국제적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일본은 현실을 바로 보고 과거범죄를 성실하게 인정하고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캐나다, 북한 수해 지원 위해 3만 달러 기부(8/14,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14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인용, 캐나다가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이달 6일 2만9천200달러를 기부하는 계약을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와 체결했으며 이 기부금은 IFRC가 올해 북한 수해 복구 특별지원 기금으로 책정한 32만 달러 총당에 사용된다고 전함.

- **北, 미국의 쿠바 제재 비난(8/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쿠바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가로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쿠바 혁명을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면서 이 나라를 고립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에 대해 "쿠바를 질식사키려고 국제무대에서 모략적인 방법으로 압력조치들을 수많이 조작발동하였으며 군사적 위협 공갈도 서슴없이 강행하였다"고 지적함.
 - 또한 "오늘의 현실은 집요하고도 끈질긴 미국의 반쿠바 봉쇄정책이 이미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쿠바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광복절 맞아 일본에 "과거죄악 청산" 촉구(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는 14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 "일본은 자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패망)70년을 넘기기전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 어지러운 과거의 죄악을 깨끗이 결산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진정한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는 데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반기문 총장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환영"(8/15,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남북한이 개성공단을 다시 열기로 합의한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함.
 - 반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가교 역할을 한 성공적인 협력사례라며 최대한 빨리 정상화되고 다시는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개성공단의 지속적인 가동이 다른 건설적인 조치로 이어지면서 남북한의 신뢰가 구축되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김정은—푸틴, 광복절 맞아 축전 주고받아(8/1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역사적인 항일 대전의 피어린 나날에 마련된 조로(북러) 친선의 전통을 부단히 심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근본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응당한 기여가 된다"고 밝힘.
-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나는 정치 대화와 호혜적인 협조를 모든 분야에 걸쳐 계속 확대하는 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힘.

● **北 "일본은 과거청산 의무 이행하라"(8/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일제의 과거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란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라며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저지른 죄악은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함.
- 신문은 "인륜 도덕상으로는 물론 국제법적으로 봐도 패전국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성실히 사죄하고 과거청산을 하는 것은 응당하다"며 일제의 죄악은 대를 두고 반드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힘.

● **北 "한반도 평화체제 좌절은 미국 태도 때문"(8/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평화는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대외정책적 이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힘.
-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았지만 미국이 '불성실한 태도'로 모두 거부했다며 이는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려는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기타 (대외 일반)
 - [중통 논평] 일본 정부의 '독도문제' 국내 특별여론조사 결과 발표 (독도영유권 주장)는 '사회여론 오도 및 국민들 속에 독도강탈 선동'으로 "파렴치한 독도강탈 야망의 발로"라고 再비난(8.12,중통)
 - 미국이 '합법적인 주권국가들에서 정부 및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내정간섭책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반제자주적 나라들의 힘 강화 및 내정간섭 배격' 선동(8.13,중통·노동신문)
 -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8.15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축전
 - 「조선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 피해자문제 대책委」 대변인, 8.14 「광복」 68주년 계기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 등 일제 강점 시기 반인륜적 범죄 책임회피 및 군국주의 우경화' 비난과 '과거청산' 촉구 담화 발표(8.14,중통·평방)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남이 선의에 호응했으면 남북관계 좋아졌을 것"(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북남관계 개선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입장'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에서 "우리는 정세가 참여한 속에서도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놓았다"며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아량 있고 선의적인 조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왔더라면 북남관계는 이미 새로운 장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절실한 것은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다방면적으로 활발하게 벌이는 것"이라며 "당국 대화와 함께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의 내왕과 접촉,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민간 교류에 대한 의지를 밝힘.
- 北 "민족끼리 힘 합치자"(8/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 개선은 조국통일의 전제"라며 "지금은 대립을 격화시킬 때가 아니라 그것을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켜 민족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때"라고 밝힘.
 - 신문은 "지금 북남관계에서는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많은 중대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남관계 개선은 명실공히 민족 공동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북과 남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미루는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단합과 통일어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 北 "대결의 남북관계, 협력관계로 전환해야"(8/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신심 드높이 6·15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글에서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악화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이 열리자면 파국에 처한 현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대결정책으로는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대결의 북남관계는 시급히 화해와 단합,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남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기본 방안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제시함.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5개항 합의서 채택(8/14, 연합뉴스)

- 남북은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책 및 발전적 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최대 쟁점인 재발방지책과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서는 명시함.
- 남북은 상설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며 공동위는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과 남측 인원 신변안전, 국제화 추진 등은 물론 이번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기업 피해 보상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해결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중책을 맡게 됨.

● 北청소년 광주 UN행사 명단 통보...내주 참석 가능성(8/16, 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다음주부터 광주에서 개최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에 참석할 청소년 3명, 인솔자 1명 등 4명의 명단을 지난 16일 UNOSDP에 통보했다고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함.
- 대회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북한 청소년들의 명단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통일부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北, 스포츠 교류도 적극적...남북 해빙무드 '띄우기'(8/16, 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이달 22일 광주에서 개최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에 청소년 3명과 인솔자 1명을 파견하기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이들의 명단을 UNOSDP에 통보했으며 통일부는 UNOSDP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아 이들의 입국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됨.
- **정부, '이산상봉 적십자접촉 23일 판문점 개최' 제안(종합)(8/16, 연합뉴스)**
 - 정부는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오는 23일 판문점 내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16일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전·KT "개성공단 전력공급·통신망 별 문제없어"(종합)(8/17, 연합뉴스)**
 -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전력과 KT 점검팀은 "공단이 재가동되면 전기를 공급하고 내부통신망을 재개통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전 점검팀 관계자는 "지금은 배전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데 정부의 공단 정상화 추진 일정에 맞춰 송전방식으로 바꿔 전기를 송전할 계획"이라고 밝힘.
- **北, 이산가족 실무접촉 수용...금강산관광 회담도 제안(종합2보)(8/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18일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 제안을 이들 만에 수용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도 제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며 10·4선언 발표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북남 적십자 실무회담은 남측의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해 실무회담 기간 면회소도 돌아보고 현지에서 그 이용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라고 제안함.
- **정부, 이산상봉 회담장소 금강산 대신 '판문점' 요구(2보)(8/18, 연합뉴스)**
 - 정부는 18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22일 갖자고 제의한 데 대해 "내부 검토 후 정부 입장을 추후에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또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를 북한이 수용한데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회담 장소를 '금강산' 대신 당초 우리가 제안한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거듭 제의함.



■ 기타 (대남)

- '대화와 협력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민족번영의 길을 열어나가자는 것이 北의 입장'이라며 '6.15·10.4선언 실천의 現 남북관계 개선' 지속 강조(8.12, 중통·노동신문)
- 남한 국정원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 위업을 해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며 '국정원 해체' 선동(8.12, 평방·노동신문)
- '조국통일은 가장 절박한 민족적 과업, 민족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온 겨레는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뛰어넘어 조국통일운동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8.13, 중통·노동신문)
- 개성공단 '제7차 남북 당국 실무회담', 8.14 진행 및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방지 및 정상운영 보장'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5개항)" 채택 신속 보도(8.14, 중통·중방·평방)
- "북남관계 개선은 조국통일의 전제"라고 연일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6.15·10.4선언 실천의 민족적 화해와 단합' 주장(8.14, 중통·노동신문·중방)
-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체 '광복' 68주년 기념 호소문(8.15)]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 신뢰의 출발점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동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며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민족의 대단합" 강조(8.15, 중통·평방)
- 北,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으로 온 겨레에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다'며 '회담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화해·협력, 평화번영을 위한 사업들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8.15, 중통)
- 北 「조평통」 대변인, 8.18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8.23, 금강산)' 및 금강산관광재개 '남북 당국 실무회담(8.22, 금강산)' 개최 제안 등 담화 발표(8.18, 중통·중·평방)
 - ① 오는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여 10.4 선언 발표 일에 즈음하여 화상상봉을 진행하도록 함. 이를 위해 북남 적십자 실무회담은 남측 제안대로 23일에 개최하도록 하며 장소는 금강산으로 함.
 - ②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도록 함. 실무회담 날짜는 22일로 하며, 회담 장소는 금강산으로 할 것을 제안함.
 - ③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개성공단 정상화, 북핵 6자회담에도 긍정적 영향>(8/15, 연합뉴스)
 -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북핵 6자 회담 재개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됨. 남북 대화와 비핵화 대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지만, 남북 대화의 진전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임.
 - 나아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비핵화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 일각에서는 남북대화가 북한이 희망하는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음. 남북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미국이 먼저 북한과 북핵문제를 의제로 한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임.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의 신병처리 문제가 이런 북미 접촉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있음.
 -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비핵화 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중국의 움직임은 시기적으로는 19~30일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후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비핵화 대화 성사의 관건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달렸음.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을 비롯한 각종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핵화 문제에는 나머지 5개 참가국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5자와 달리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핵 군축 차원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임.
 -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사전조치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차원임. 한미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활동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 이른바 '2·29 합의 플러스 알파(α)'의 사전조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비핵화 대화가 얼마나 빨리 될지는 이런 입장차가 얼마나 빨리 좁혀지느냐에 달렸음.
 - 일단 한국·미국·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 5자간에 구체적인 대화 재개론에는 입장차가 있는 만큼 앞으로 대화 재개 국면을 만들기 위한 5자간의 활발한 물밑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핵 6자회담 올해 중 재개 어려워”>(8/15,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이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한국 측 6자



- 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조 본부장은 이날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 차관과 회담한 뒤 러시아 주재 한국특파원단과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표시했음.
 - 조 본부장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 한국과 미국 등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확실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아직 이를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회담이 재개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음.
 - 조 본부장은 "현재로선 공이 북한에 넘어가 있는 만큼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 측이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 본부장은 이와 관련한 러시아 측의 입장과 관련,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미국보다 조속한 회담 재개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선 우리와 견해를 같이한다"고 소개했음.
 - 러시아는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둘러싼 현재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구상을 밝혔지만 아직 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이르다고 조 본부장은 전했다.
 - 한편 러시아 외무부도 이날 발표한 언론보도문에서 조 본부장과 모르굴로프 차관 간 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양측이 북한의 미사일-핵 프로그램과 연관된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역점을 두고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양측은 또 한반도 핵 협상 타결과 동북아 지역 상황 안정화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러-한 양자 및 6자회담 참가국간 협력 및 공조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을 이뤘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나. 미·북 관계

- <미 국무부 "북 억류 케네스 배 건강 악화 우려">(8/13,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면서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음.
 - 머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2일 정레브리핑에서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관계자가 9일 평양의 한 병원에서 배 씨를 만났으며, 이는 배 씨가 억류된 이후 7번째 영사 면담이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배 씨를 즉각 사면하고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했음.
 - 스웨덴 외무부 살로타 오자키 마시야스 대변인은 (억류) 환경을 고려할 때 배 씨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지만 그에겐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웨덴대사관 측이 배 씨 가족이 보내는 편지 뿐 아니라 비타민과 보조식품, 책 등을 배 씨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음.



- 앞서 케네스 배 씨의 여동생 테리 정 씨는 11일 미국 'CNN' 방송과 '뉴욕 타임스' 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배 씨의 몸무게가 22kg 이상 빠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 상태가 크게 나빠진 만큼 송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배 씨가 여러 질병을 앓고 있으며 북한에서 일부 질병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것임.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시력 손상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가운데 배 씨의 아들 조너선 배 씨가 벌이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석방 청원 운동에 1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노동신문 "한반도 평화체제 좌절은 미국 태도 때문">(8/16, 연합뉴스)
- 북한은 16일 한반도 평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왔으며 평화체제 건설 노력이 좌절된 것은 미국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평화는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대외 정책적 이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 신문은 한반도에 전쟁을 막기 위한 구속력있는 체제와 협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전협정도 '이미 휴지장이나 다름없는 상태'인데도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국이 시종일관 평화애호정책을 틀어쥐고 나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았지만 미국이 '불성실한 태도'로 모두 거부했다며 이는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려는 의지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남북한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다시 거론하며 이를 위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됨.

다. 중·북 관계

- <中 "핵실험 감지 정보 국제기구와 공유">(8/12, 조선일보)
- 중국이 자체 확보한 핵실험 감지 정보를 국제기구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CTBTO)'와 공유하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 장위린 중국 국방부 부부장은 지난주 CTBTO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라지나 저보 CTBTO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 중국은 10개 핵실험 감지 시설을 갖추고 핵실험 이후 지진파와 방사능 물질 등을 탐지함. 이 중 베이징·란저우·광저우에 있는 3개 시설은 방사성 핵종(核種)을 분석해 핵실험의 종류를 파악함.
 -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 미국 등은 방사능 물질을 포집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북한이 종전처럼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실험을 했는지, 첫 농축 우라늄 핵실험에 성공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임.

- 중국이 북한 핵실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국제기구에 제공할 경우 '핵 모호성 전술'을 써온 북한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군 장성 출신인 쉬광위 중국 군비통제·군축협회 선임연구원은 "(국제적인 핵실험) 감지 시스템이 비밀 핵실험까지 탐지하고 분석한다면 북한의 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번 합의는 북한에 주는 경고"라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 최고지도부를 만날 때마다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김정은, 방중하려면 '비핵화 대화' 동의해야">(8/12, 연합뉴스)

- 스용밍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2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려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모종의 진전된 조치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만, 김 제1위원장의 방중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정보도 들은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음.
- 김 제1위원장은 작년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갖고 있던 모든 권력을 승계했지만, 20개월이 넘도록 후견자 역할을 하는 중국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올해 가을이 그의 첫 방중 시점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의 강한 만류에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김 제1위원장의 방중을 중국 지도부가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음. 스 연구원의 발언은 사실상 후자 쪽에 무게를 둔 셈임.
- 스 연구원은 이어 "북한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의 (북중관계) 복원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라는 점을 재차 거론했음.
- 스 연구원은 그러나 제3차 핵실험 이후 핵과 경제를 같이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한국 등 주변국도 "(비핵화) 문제가 즉각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음.
- 이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은 그것을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너무 높다고 여길 것"이라고 부연했음.
- 스 연구원은 북한이 지난 수개월간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하지 않은 것은 좋은 신호라고 본다며 "우리는 여전히 기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만약 대화를 하기 전에 '당신은 뭔가를 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은 대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내 생각에는 대화(6자회담) 전에는 어떤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 현재 중국 정부는 6자회담 당사국들에 대해 즉각적인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임.



● <中환구시보 "북한, 중국의 중요 방어막">(8/13, 연합뉴스)

-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에 지정학적 방어막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음.
- 환구시보는 13일 자사 평론원 명의의 논평에서 "중조(북중) 우호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정학적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음.
- 환구시보는 "조선(북한)은 지정학적 의미에서 중국의 중요한 방어막"이라며 "이는 명나라 때 시작돼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구시보는 "시대가 변했지만 지정학적 관성은 많은 변화를 초월한다"라며 "오늘날 조선의 국가 안보는 여전히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 신문은 북한이 사회주의권에서 전례가 없는 3대 세습을 하는 등 중국식 사회주의와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의 방식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환구시보는 북중 양국의 체제·의식 차이로 말미암은 충돌이 빚어져 지정학적 요인이 무시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국이 바라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음.
- 아울러 이 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것과 북중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규정했음.
- 환구시보는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를 해치고 중국의 국익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우리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구시보는 또 북한이 내부 노선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 중국은 북한이 스스로 수용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지나친 강요를 할 수는 없다면서 과거 사회주의를 수출하듯 개혁개방을 수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음.

라. 일·북 관계

● <北 조선중앙통신, '日 독도 여론조사' 규탄>(8/12,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 문제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데 대해 "용납 못할 영토 강탈 야망의 발로"라고 규탄했음.
-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뿐 아니라 방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인 독도를 어떻게 해서나 제 것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야심은 끝이 없다"며 이같이 비난했음.
- 통신은 일본이 "역사를 왜곡해 독도가 마치 그 누구에게 빼앗긴 땅인 것처럼 사회여론을 오도하고 국민들 속에 독도 강탈을 선동하고 있다"며 "철면피하고 오만무례"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이 최근 노골화되는 우경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평화헌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해외침략을 위한 범죄적인 재침전략, 전쟁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 또 "일본의 영토야망은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정에 필연코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며 "영토야망은 일본을 완전한 국제적 고립과 파멸로 이끌어갈 뿐"이라고 경고했음.
-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자국민을 상대로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지난 1일 응답자의 61%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도발 중단'을 요구하며 공식 항의했음.

마. 러·북 관계

● <김정은 푸틴, 광복절 맞아 축전 주고받아>(8/15,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68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음.
- 김 제1위원장은 "역사적인 항일 대전의 피어린 날에 마련된 조로(북리) 친선의 전통을 부단히 심화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과 근본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도 응당한 기여가 된다"고 밝혔음.
- 이어 "나는 세기와 세대를 이어온 전통적인 조로 친선 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과 친선적인 러시아 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며 끝을 맺었음.
- 푸틴 대통령도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축전에서 "민족적 명절인 조선해방의 날에 즈음해 당신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며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친선적이고 건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푸틴 대통령은 "나는 정치 대화와 호혜적인 협조를 모든 분야에 걸쳐 계속 확대하는 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이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이어 "당신께서 건강하고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인민에게 행복과 복리가 있기를 바란다"며 인사를 마무리했음.
- 두 사람은 지난해 광복절에도 인사문과 축전을 주고받았음.

바. 기 타

● <파나마 "北 선박 수색종료...미사일 발사장비도 발견">(8/12, 연합뉴스)

- 파나마 정부가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대한 수색을 종료한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음.
- 파나마 공공안전부 호세 라울 물리노 장관은 청천강호에서 설탕 포대를



- 견어내고 마지막 컨테이너를 꺼냈으며 이같이 전했다. 이 컨테이너에는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 있다고 물리노 장관은 전했다.
- 파나마 정부는 앞서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던 청천강호가 미약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5일 이를 억류했음.
 - 애초 청천강호는 설탕 1만만 실었다고 보고했지만 수색 결과 설탕 포대 밑에서 미신고 군사장비 등을 실은 컨테이너 25개가 발견됐음.
 - 컨테이너에는 1950년대 구 소련산 미그 21 전투기 2대와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같은 기종 전투기의 엔진 12기, 로켓 추진식 수류탄 등이 들어 있다고 파나마 당국은 밝혔음.
 - 쿠바는 구형 무기와 전투기를 북한에서 수리해 오기 위해 청천강호에 선적한 것이므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전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탄발사기 실탄이 나오는 등 이런 설명과 어긋나는 정황이 제기됐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원자력협정 연장안 美의회 승인 순탄치 않을 것”>(8/16, 연합뉴스)
 - 한미 양국 정부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논란 끝에 '2년 연장안'에 합의했으나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음.
 - 미국 의회의 에너지 전문가인 마크 홀트 입법조사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한미원자력협정 세미나에서 "의회 내에서는 협정의 본질적 개정 방향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 한미 원자력협정은 당초 내년 3월19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 직전 협정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음. 연장안은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법처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 하원에서는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연장안이 지난 7월 하순 소관 상임위원 외교위를 통과했으나 아직까지 하원 전체회의와 상원 심의 및 표결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음.
 - 홀트 조사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연장안의 경제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 의회의 조기 통과를 희망한다"며 "그러나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연장안이 언제, 어떤 식으로 처리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음.
 - 그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스티브 쉐벗(공화·오하이오)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의 수준을 고려할 때 핵 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



- 다"며 "이번 협상이 중요한 이유"라고 연장안에 찬성했음.
- 그러나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플루토늄 재처리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며 "재처리 허용은 핵확산 우려를 심화시키기 때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
 - 그는 "한국 정부는 파이로 프로세싱 형식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저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는 것을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고 싶어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우려가 크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외교적 목표에 차질을 주는데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요한 우선순위인 비확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음.
 - 그는 연장안 처리가 늦어져 협정이 공백상태를 빚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유럽원자력공동체가 199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때 의회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협정이 일시적으로 종료된 적이 있지만 곧바로 개정돼 큰 문제는 없었다"며 "이번 협정 연장안이 언제 처리될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음.
 - 홀트 조사관은 2년 연장을 가정한 협정개정의 방향에 대해 △현행 유지 △협정 재연장 △조건부 개정 △합의 불발 등 4가지의 가능성을 제기했음.
- <한미, 22~23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3차 협의>(8/16,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22~2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음.
 - 한국측에서는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관계관이, 미국측에서는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 참석함.
 - 양국은 지난달 개최된 1~2차 고위급 협의에서 확인한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이번 협의에서부터는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 가장 큰 쟁점은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으로 양측이 제시한 금액이 1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상 유효기간 내에 연간 방위비 인상률을 어떻게 정할지도 입장차가 큰 부분임.
 -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분담금 미사용·미집행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은 협의를 하고 있음.
 -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왔음.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났음.

나. 한·중 관계

- <재탈북자 김광호씨 구금 한달…깊어지는 中고민>(8/18, 연합뉴스)
- 재탈북자 김광호씨 가족이 중국에 구금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중



- 국 정부는 여전히 이들의 신병 처리에 대한 답을 미루고 있음.
- 정부는 중국이 지난달 중순 이들의 구금 사실을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 확인한 이후 이 사안을 본격 협의해 왔으나 의미 있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데는 김씨 국적을 어디로 규정할지 모호한 데다 남북한의 외교적 압박으로 쉽사리 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정부는 김씨 부부와 딸은 우리 국적을 취득한 만큼 이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에 대한 문제라는 입장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함께 탈북한 처제와 처남도 개인 희망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 북한 당국도 김씨 일행은 북한 주민이라고 주장하며 북송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가족이 김정은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이용된 만큼 북측으로서도 어느 탈북자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상황임.
 - 정부는 김씨의 재입북 후 대남 비방 기자회견은 강압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인정할 수 없으며 북송시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도 이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는 입장임.
 - 이번 사건이 지난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공개 사례라는 점도 중국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김씨 일행에 대한 영사면담 성사를 문제 해결의 기점으로 보고 중국측에 거듭 영사면담을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음.
 - 일단 중국 당국이 '탈북→재입북→재탈북'이라는 혼치않은 경로를 밟은 김씨 일행의 행적 등을 조사하는 데만도 다른 경우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구금 기간만도 수개월을 넘어설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 탈북자 문제에 밝은 한 인사는 "중국은 주변국 국민 성향을 잘 파악해 그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면서 "이번 사안도 김씨에 대한 결정이 아무런 메시지가 안될 때에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 한·일 관계

- <한국, 日우경화 대응 딜레마... '투트랙' 접근>(8/14, 연합뉴스)
 -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행보를 우려 섞인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사 문제부터 헌법해석 변경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 우



- 리 정부의 고민임.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한·미·일 3국의 대응체제가 균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임.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따라서는 동북아 정세의 균형점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일 대응은 투트랙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음.
 -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련국인 일본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이른바 원칙과 관련된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대일 대응 기조임.
 - 일본의 망언과 독도 도발 등 역사인식·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펼치고 있음.
 - 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헌법 개정 등 이른바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신중한 태도 속에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정도임.
 - 그러나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침략의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군사적인 대국화로 의심되는 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우려와 반감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신중한 태도도 변할 가능성이 있음.
 -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음.
 -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임. 정부는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응을 아끼고 있음.
 - 실제 아베 내각의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여건상 일본의 개헌이 쉽지는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지만,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과 군대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정부도 적절하게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日,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 명기">(8/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예시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때 사용할 사례집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불허하는 현행 헌법 해석으로 대응기 어려운 구체적인 케이스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 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4일 보도했음.
 -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임. 그런 만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됨.
 - 일본 정부는 또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 교통로에서의 기뢰 제거 작업'도 현재의 헌법 해석으로 대응이 곤란한 사례로 명기하는 방안



- 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연립여당과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음.
- 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당초 정부가 주관하는 전문가 기구인 '안전 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보고서를 정리하면 그것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었음.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 뒤 당정협의를 시작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공명당이 반발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설득작업을 하려는 계산인 것임.
- 아베 총리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집단적 자위권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내각 법제국의 현행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음.
- 따라서 아베 총리는 간담회가 만들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됨.

● <반성없는 일본발 과거사 도발로 얼룩진 68번째 광복절>(8/15, 연합뉴스)

- 일본 아베 내각 각료와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다시 불거진 아베 정권의 침략부정 역사인식 등 일본발 과거사 도발로 68번째 광복절이 얼룩졌음.
-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과 후루야 게이 지 납치문제 담당상,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 담당상 등 아베 내각의 각료 3명은 한국, 중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15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음.
- 아베 총리는 한국,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대리인을 통해 '자민당 총재 아베 신조' 명의로 공물료를 봉납했음.
-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날 낮 정부 주최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 식사에서 역대 총리들이 표명해온 '아시아국들에 대한 가해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켰음.
- 아베 정권은 특히 매년 총리의 추도식에 들어 있던 '부전(不戰) 맹세' 문구도 외면함으로써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무리아마 담화'를 부정하려는 듯한 역사인식을 다시 드러냈음.
- 또한, 이날 야스쿠니에 참배한 국회의원 수도 확인된 인원만 105명으로 1989년부터인 헤이세이 시대 들어 가장 많았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용기있는 리더십 발휘를 주문하고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은 특히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이지만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



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한국 정부는 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일본의 지도급 정치인들과 일부 각료들이 침탈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라. 한·러 관계

● <한·러, 원자력 협력방안 집중 논의>(8/18, 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는 19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제16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열어 양국간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함.
- 양국은 문해주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러시아 원자력부 및 원자력공사(Rosatom)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이 회의에서 지난 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핵융합 분야 등 17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이 회의에서 양국은 소동냉각고속로, 선진핵연료, 의료·산업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우주환경 기반기술개발 등 분야의 기술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또 인접 국가로서 방사선 비상대응, 원자로 중대사고 실험·해석 연구 등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참여국인 양국은 '핵융합 플라즈마의 고속 전자기파를 이용한 가열 기술 협력'을 신규의제로 진행할 예정임.
- 이 밖에 원자로 중대사고 연구, 방사선기술기반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 개발, 한·러 방사선의학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양국의 원자력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굴해 추후 한·러 정상회담 협력 의제로 발전시킬 계획임.
- 한·러 원자력공동위원회는 1990년 '한국 과학기술부와 러시아 원자력부간 원자력의정서', 1999년 '한·러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1991년부터 양국 교대로 개최되고 있음.

마. 미·중 관계

● <중학자 "美전략은 中·日충돌로 어부지리 얻는 것">(8/14, 연합뉴스)

- 런웨이등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연구원은 14일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기본은 "중국과 일본의 양패구상으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 런 연구원은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 1면에 게재한 '누가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지진을 만드는가'라는 기고문에서 미국이 "중일 간 모순을 조장하는 동시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평화의 정치적 토대가 됐던 원칙이 지금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의 주도권을 쥐려 하



- 면서 군국주의적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음.
-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적 움직임에 대해 동아시아 주변국가들이 격렬하게 반응할 것을 알면서도 미국이 사실상 용인하는 것은 중국의 '굴기' 저지라는 부분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고도로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음.
 - 런 연구원은 이어 현재 미국은 일본의 야심을 방치하는 한편 일본과 중국 사이의 모순을 더욱 확대하는 방법으로 일본을 더욱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그는 미국의 이같은 동아시아 전략은 "장래에 지역의 평화안정과 지역의 질서를 깨트리고 중미 간 상호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음.
 - 인민일보가 런 연구원의 이 기고문을 이날 1면 주요기사로 배치한 것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는 중일 간 관계에 대해 중국당국이 일종의 '미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해석됨.

○ <미·중 국방수장 19일 워싱턴 회동…북핵 등 논의>(8/18,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회동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17일 발표했다.
- 두 국방·안보 수장은 지난 4월 북한발 위협 대처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전화 통화한 적은 있으나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임.
- 이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초 캘리포니아주 서니랜즈의 랜초미라지에서 합의한 양국 간 군사 부문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아울러 양국 간 첨예한 이슈인 사이버 해킹 공방을 비롯해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영토 분쟁,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의 지역 현안도 주요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 헤이글 장관은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정부와 군이 미국 컴퓨터망을 엿보고 있으며 일부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음.
- 그러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감시 프로그램 운용 사실을 폭로하면서 중국 이동통신사나 대학 등도 도청 대상에 포함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궁지에 몰린 상태임.
- 북핵 문제에서는 양국 정상이 그랬듯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는 한목 소리를 낼 것으로 보임. 헤이글 장관과 창 부장은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설명할 계획임.
- 한편 창 부장은 워싱턴DC 방문에 앞서 하와이주에 있는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찾아 새뮤얼 리클리어 사령관을 만나고 콜로라도주에 있는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 및 북부사령부에서 찰스 자코비 사령관 과도 면담했음.



- <“미국, 작년 설 때 자국 방문 중국인 감청”>(8/18, 연합뉴스)
 - 미국 국가안보국이 작년 음력설 때 자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했다고 중국중앙(CC)TV가 17일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신원론포에서 워싱턴포스트(WP)를 인용, 보도했음.
 - WP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 문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미국 국가안보국의 통신 정보 수집 건수가 특별히 증가했다면서 이는 중국의 설인 춘제(春節)를 맞아 중국을 찾아온 중국인에 대한 불법 감청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일주일 이상 긴 연휴가 이어지는 춘제 기간에는 많은 중국 관리들과 부유층이 미국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 스노든은 홍콩에 머무르던 지난 6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의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운영 기관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도·감청과 해킹을 자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바 있음.

바. 미·일 관계

- <“美·日, 외무·국방장관회의 10월3일 개최”>(8/15,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3일 도쿄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가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14일(현지시간) 밝혔음.
 - 소식통은 양국 2+2 장관 회의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사사태 발생 때 미군과 자위대 역할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에 정식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미·일 2+2 회의는 벅락 오바마 행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 사이에선 처음이며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도 오키나와 미군 후테마 비행장 이전 문제 등을 협의한 1996년 이래 17년 만임.
 - 이번 회의에는 일본 측에서 기시다 후미오 외상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미국에선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함.
 - 양국 장관들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말고도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MD) 확충과 중국의 해양진출 증대, 사이버 안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등 같은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망했음.
 -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금지 변경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새로운 방위정책을 설명할 예정임.
- <“아베 총리·미 상원의교위원장 회담 "동맹 강화”>(8/15,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오전 일본을 방문 중인 로버트 메넨데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관저에서 회담했음.
 - 중국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해양진출을 꾀하는 등 아시아태평양지



- 역의 안전보장환경이 변하는 상황을 근거로 양국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음.
-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 환경이 많이 변하는 중에 미·일 동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 메넨테즈 위원장은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 관해 양국이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일본은 동아시아지역에 미국이 관여하는 기축"이라고 평가했음.
 - 양측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서도 협력할 것이라는 방침을 확인했음.
 - 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외무성에서 메넨테즈 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했음.

사. 미·러 관계

● <스노든 사태 따른 러-美 외교 공방 지속>(8/14, 연합뉴스)

-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러시아 임시 망명을 둘러싼 미-러 양국 의 외교 공방이 계속되고 있음.
- 이번에는 크렘린궁이 대러 관계에 공백기를 두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뒤늦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아제르바이잔 방문에 수행한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외교수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양국의 주요 장관들 사이에서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관계 중단이냐"며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현실은 접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양국 외교·국방 장관 회담인 '2+2' 회담을 예로 들었음.
- 우샤코프는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오고 양국 장관들이 대화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라인을 통해서도 실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에) 오든 안 오든 양국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양국 관계에 중단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음.
- 지난 7일 백악관은 9월 3~4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예정이던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9월 5~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만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 러시아가 미국 정부의 끈질긴 송환 요청에도 미국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폭로하고 러시아로 도피한 스노든에게 임시 망명을 허가한 데 대한 항의 표시였음.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계획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과 인권 문제를 둘러싼 상호 비방전 등도 배경으로 작용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집권기(2008~2012년)에 는 미-러 양국 관계가 좋았는데 2012년 5월 푸틴이 크렘린궁에 복귀하 면서 반미 수사(修辭)가 강화됐다고 꼬집기도 했음. 그는 푸틴 대통령과 의 개인적 관계를 묻는 질문에 "나쁘지 않다"면서도 "때론 푸틴은 교실 뒤쪽에 앉아 (수업을) 따분해하는 아이같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음.

아. 중·일 관계

● <중국 외교부 "일본과의 관계 매우 어려운 상황">(8/12,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2일 '중일 평화우호조약 서명 35주년을 맞아 "현재 중 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양국관계 정상화를 촉구했음.
-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 문 답 형식의 글을 통해 "35년 전 오늘 중국과 일본이 '중일 평화우호조약' 에 서명했으며, 이 조약은 법률형식으로 중·일 공동성명의 각항 원칙 을 확인하고 양국 우호의 큰 방향을 명확히 밝혀 중일관계의 장기적 발 전을 위한 정치적 기초를 더욱 공고화했다"고 평가했음.
- 중일 공동성명은 지난 1972년 양국이 외교관계를 회복하고자 체결한 것 으로 이 공동성명이 나온 후 수교했음.
- 양국은 이어 상호 평화우호 관계를 위한 국제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978년 베이징에서 중일 평화우호조약에 서명했음.
- 중국과 일본은 하지만 센카쿠(중국명:다오위다오) 등으로 심각한 갈등에 빠져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평화우호조약 35주년 기념일인 이 날 홍 대변인의 발표문만 나왔을 뿐 양국간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았음.
- 홍 대변인은 "현재 중일관계는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당면해 있다"면서 "쌍방은 양국간 4개 정치문건의 기초위에서 '역사를 거울로 삼아 미래를 지향한다'는 정신으로 양국관계의 당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관계 회복과 정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중일은 상호 이웃국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선린우호관계 발전 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일 평화우호조약은 쌍방이 기념하고 제대로 준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 <中 함모 랴오닝함, 일본 패전일 '무력 시위'>(8/14, 연합뉴스)

-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이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해상 군 사훈련을 위해 출항했음.
- 중국 랴오닝해사국은 랴오닝함이 15일부터 24일까지 보하이만 북부 해 역 4곳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면서 훈련 기간 모든 선박의 훈련 해역 진입을 금지했다고 중국 환구망이 14일 전했다.
- 이번 군사훈련은 랴오닝함에 탑재된 함재 전투기 쟈(殲)-15의 운영 능 력 향상을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랴오닝함은 칭다오기지에 배치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25 일 간 보하이만에서 쟈-15의 이·착륙과 유류 및 전력 보급 훈련을 했음.



- 환구망은 라오닝함이 지난 6월에 이은 함재기 훈련을 진행하기 위한 출항일을 일본의 패전일인 15일로 잡은 데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중국이 대대적인 항공모함 훈련을 일본 패전일에 시작함으로써 우경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에 대한 무력시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한 중국의 분개>(8/15, 로이터)

- 일본의 아베 총리는 세계 2차 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배를 기념하는 지난 목요일에 전사자들이 합사되어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음. 또한, 내각 관료 3인은 직접 방문을 하여 중국과 한국으로 부터 강한 비난을 받으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발걸음을 내딛음.
- 아베 총리는 중국과 한국의 긴장감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그의 보수적인 사상을 유지하는 방안을 택함.
- 하지만, 내각 관료 3인과 수십명의 입법관들이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여 그들의 경외심을 표시함.
- 이러한 일본 고위 정치인들의 신사 참배가 중국과 한국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는 이 신사에 14명의 전쟁 전범들이 훈장을 받으며 다른 전사자들과 함께 합사되어있기 때문임.
- 중국 외교부는 "이러한 행동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려는 본질적인 시도라고 본다"는 주장임.
- 한편,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개탄스러운 일이라 칭하고, "일본의 관리들이 여전히 역사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이 진실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함.
- 하지만, 일본 보수주의자들은 이는 단지 전사자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이며 전쟁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
- 경제적인 협력과 최근 아베 총리가 시진핑 국가 주석에게 제안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불편한 면이 남아있음.

자. 중·러 관계

● <시진핑-푸틴, 내달 G20회의 때 양자 정상회담>(8/16,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 시 주석은 국가주석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의 전략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음.
- 중국 외교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회담을 비롯해 제9차 중-러 전략안보대화 결과 등을 일부 공개했음.



- 외교부에 따르면 양 국무위원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달 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이는 "하반기 중·러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양측은 또 중러 정상이 지난 3월 만남을 통해 양국이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공통인식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현재 중러관계는 양국 정상이 지정한 방향으로 정확히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어 정치, 경제, 군사, 인문 등 각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고 있으며 중대한 국제, 지역적 문제에서도 밀접한 교류·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양측은 남북한 문제와 이란핵, 시리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대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27일부터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에서 '평화사명-2013'이라는 이름으로 전개한 대규모 대테러 연합훈련이 전날 오후 종료됐다.
- 양국 병력 1천500여 명, 탱크, 대포, 전투기, 헬리콥터 등이 투입된 이번 훈련에서 양측은 유사시 연합지휘, 연합정찰, 정보공유, 합동타격 등을 시험했다.
- 일각에서는 북한 쪽에 가까이 있는 선양군구 병력이 이번 훈련에 대거 참여한 점으로 볼 때 북한 '긴급사태'에 대비한 훈련의 성격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차. 기. 타

● <미국, 韓日 균열 '곤혹'...中·日 갈등엔 일본편>(8/14, 연합뉴스)

- 과거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3국의 갈등구도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시선은 복잡 미묘한 상황임.
- '힘의 우위'를 앞세워 수십 년 간 역내 질서를 좌우해온 미국이지만 3국 관계에 구조적 장애가 되는 이 싸움에는 선뜻 끼어들지도, 그렇다고 뒷짐만 지고 있지도 않는 모호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 여기에는 동북아는 물론 아시아 전체 판도를 겨냥한 'G2(주요 2개국) 차원의 외교안보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공통된 시각임.
- 이는 '대(對)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키워드가 중심에 놓여 있다는 의미임. 급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미국의 역내 패권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셈법이 깔려 있다는 얘기임.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전략도 그 연장선임.
- 이런 맥락에서 역내의 두 우방인 한·일 간 갈등은 미국으로선 달갑지 않은 뉴스임.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 힘과 위상이 약화된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한 결정적 동력이 바로 한·미·일



- 삼각협력 체제이기 때문임.
-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지난달 취임회견 때 한·미 동맹을 지역안정의 '린치핀(linchpin·구심점)', 미·일 동맹을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임.
 - 미국은 일단 양국 간 긴장과 갈등을 자제시키면서 공통의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는데 외교력을 모으고 있음.
 - 한·일 갈등과는 달리 중·일 갈등은 미국에 대중국 견제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센카쿠(중국명:다오위다오) 영유권 갈등을 놓고 미국은 사실상 일본을 두둔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중국의 팽창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음.
 - 다만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지나치게 포위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음. 자칫 지역안정이라는 큰 틀의 판이 깨지고 경제교류와 지역안정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임.
 -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자칫 일본의 보수우경화 움직임을 '용인'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임. 이는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을 크게 '자극'하고 있음.
 - 팔 부회장은 "미국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일본이 주변국과의 긴장을 고조하지 않는 속도와 범위내에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분석했음.
 - 결국 미국으로서는 한·중·일 3국의 갈등구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역내 주도권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큰 틀의 판이 깨지지 않도록 지역안정을 꾀하는 고도의 '상황관리'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임. 이는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이 동맹이라는 틀을 넘어 얼마나 냉정한 전략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대목임.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